



비과세 보단 운용사 능력·정보력 따져야

역외펀드, 국내·해외펀드 전환 유리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개인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 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불에서 300만불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조치는 경상수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며, 실질적인 해외부동산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도 상향을 조정하겠다는 명분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는 1월 11일 '부동산 시장 제도개편 방안'이 발표된 직후 나온 것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국내부동산에서 해외주식과 해외부동산으로

분산하고, 종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경상수지 흐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중국, BRICs 등의 해외펀드 수익률이 국내 증시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해외펀드 누적액이 총 20조원이 넘는다. 이번 조치 발표로 인해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 역외펀드나 역외펀드로 구성된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의 환매 움직임

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수익률을 중심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절세에 대한 만족주의가 결합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지 과거 수익률과 절세차원에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마치 앞은 보지 않은 채 백미려만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

해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 매력적인 일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

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해외지역에 투자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여부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정보력과 기업분석능력,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단, 역외펀드나 역외펀드로 구성된 재간접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 수익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펀드 환매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외펀드의 비중을 국내펀드나 운용능력이 겹친다면 해외펀드로 전환한다면 투자수익의 대부분을 투자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소비자 신뢰지수 亞·太국중 '꼴찌'

한국 13개國中 13위

■ 마스터카드 소비자 신뢰지수

순위	국가	소비자 신뢰지수	증감
1	베트남	93.7	+4.1
2	홍콩	88.8	+0.3
3	싱가포르	82.5	+8.6
4	중국	81.2	+3.0
5	일본	68.3	-0.6
6	태국	65.1	+36.5
7	인도네시아	62.5	+20.1
8	뉴질랜드	61.0	+15.8
9	필리핀	57.2	+5.3
10	호주	45.3	-1.2
11	말레이시아	37.5	-13.9
12	대만	30.8	+1.7
13	한국	29.3	+1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홍콩 경제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의 종상위 소득계층 5천 405명을 대상으로 응답기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29.3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6개월전보다는 1.2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마스터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와 고용, 삶의 질, 고정수입, 주식시장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의 전망을 물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비관적인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반기전보다 4.1 포인트 상승한 93.7로 가장 높았고 홍콩이 88.8, 싱가포르 86, 중국 81.2, 일본 68, 3 등으로 이어졌다.

/총동=연합뉴스

중기청-KT-전국 시장상인聯

재래시장 IT화 추진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순회교육

중소기업청과 KT가 국내 재래시장의 IT(정보통신)화에 적극 나섰다.

18일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서 중소기업청, KT,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국의 재래시장 IT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보급형 PC, 초고속인터넷 등 IT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 디지털 혁신 상인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재래시장 정보화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전국 재래시장에 PC 3만대와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전국 600여개 재래시장에 보급형 PC 3만대를 시가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키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단속

국세청은 오는 3월 12일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들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를 집중 관리,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들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비용 허위 계상 등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등 소지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의 안내문을 오는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예방 안내문을 받고도 안내 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정신고 안내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재경부 세제실장 "세금 잘낸 의료기관 감세혜택"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어제 관계전문가, 협회 등과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 "의료기관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으로 의료증빙을 접증 할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어제 관계전문가, 협회 등과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 "의료기관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으로 의료증빙을 접증 할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